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는 포스코 노동자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불법파견 소송 최종 승소 ... “18,000명 하청노동자 금속노조 가입 조직할 것”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는 포스코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2011년 5월 3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1차 근로자지위확인 소를 제기한 지 11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2016년 8월 17일 노동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늘 판결은 제철산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2011년 1차 15명, 2016년 2차 44명의 조합원이 제기한 집단소송 판결이다. 이날 포스코 노동자 인정 판결을 받은 조합원은 55명이다. 양동운 전 지회장 등 네 명의 조합원은 정년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을 각하했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7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자겸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선고를 너무 늦게 해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양동운 동지 등 네 동지를 생각하면 서럽기 그지없고 눈물만 나온다. 네 동지 미안합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승소
의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함
'8.(목) 장소_ 대법원 앞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

구자겸 지회장은 “우리나라 대자본들은 스스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천문학적 소송비를 부담하면서 대형 로펌을 이용해 끝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며, 하청업체 노동력을 착취해 배를 불리고자 이 순간에도 혈안이 돼 있다”라고 규탄했다.

구자겸 지회장은 “포스코는 많이 늦었지만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50년 넘게 착취한 모든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고용하라”라고 촉구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첫째, 대법원이 포스코는 일관제철소로서 연속 공정이라고 봤다는 사실이다”라며 “법원은 하청과 정규직 생산공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정규직들의 작업에 영향을 미쳐 라인이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정기호 변호사는 “둘째, 하청업체 명의 작업 표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스코의 개입이 있었다면 독자 작업 지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다. 셋째, 포스코가 하청업체와 공유하는 생산관리시스템(MES :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은 하청업체가 수

정할 수 없는 원청의 구속력이 있는 지휘명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정기호 변호사는 “제철 공정 근로자 파견을 인정한 최초 사례 판결이고, 일관제철소의 철강 제조공정은 본질상 도급 관계가 불가능한 근로자 파견이라는 판결이다”라면서 “후속 소송, 현대제철 소송의 지표가 될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덧붙였다.

지회는 현재 7차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며, 2017년 제기한 3, 4차 소송 221명은 광주고법이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지회는 포항과 광양제철소 100여 개 하청업체, 18,0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금속노조 가입을 조직하고, 추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덧붙여 대법원판결 이행, 범죄자 최정우 회장 처벌, 포스코 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천명했다.

“조선소에서 쏘아 올린 착취구조 철폐, 한국 사회가 함께하자”

노조, 대우조선하청 파업 마무리 기자회견 ... “1,100만 비정규직 위해 싸우겠다”

금속노조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에 관심과 지원을 보낸 국민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 사회 불평등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사회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금속노조는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하청 파업 종결에 따른 금속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에 대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생지옥 같은 삶을 한국 사회에 낱알이 알려냈다” 라면서 “대우조선 해양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뒤에 숨은 진짜 사장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내는 의미 있는 사회적 승리”라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 사상 최초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삼권의 사용해 조선소 생산을 멈추며 조선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준 투쟁이다”라고 평가했다.

금속노조는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6년 만에 조선산업 최초로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조선소 협력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라며 “대우조선 해양 조선소에서 노동조합이 하나의 주체로 우뚝 서는 쾌거를 이룬 역사적인 투쟁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로 시작한 투쟁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비결은 시민사



회, 정치권, 종교계, 법조계 등 많은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넘어 한국 사회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사회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라면서 많은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51일 투쟁을 마무리 지었지만, 아직 투쟁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며 “우리가 투쟁을 통해 얘기한 문제들은 아직 현장과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방치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우리 투쟁은 대우조선 안에서 터진 문제이지만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다” 라면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 산업 전반을 뒤덮고 있는 다단계 하청 착취구조 철폐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을 가로막는 원청 사용자 책임,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자본의 손해배상·가압류 등 조선하청노동자들이 쏘아 올린 과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이 투쟁을 이어가겠다”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4.5% 인상에 그친 임금과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은 원·하청 노·사가 TF팀을 구성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노조는 한국 사회 다단계 하청 착취구조 철폐와 노동삼권 특히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자본과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을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만드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을 벌여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책임을 법제화해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노정교섭에 나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조선산업 미래,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살리는 대책을 논의하자”라고 촉구했다.